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6. 3. 31(목)	
		작성 문의	정부업무평가실 평가관리관실 평가관리과 과장 백승일 / 사무관 민희선 (Tel. 044-200-2489, 2490)
* 엠바고 : 3.31(목) 18시(회의 종료) 이후 사용			

‘16년에는 국민체감형 정상화 과제를 중점 추진

- 정부,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확정
 - 국민체감 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개선 등) 15개 선정·추진
- 국무조정실은 3.31(목)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 체제를 유지하되,
 - * 100대 정부핵심 과제: 기존과제 79개(완료 과제 등 제외)+신규과제 21개
 - 그 중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15개)를 선정·추진하여 국민들이 정상화 효과를 확실히 체감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다.
- 100대 정부핵심과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점검·관리하고,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10%)할 계획이며,
- 특히,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 심층 분석, 연말 평가시 가감점 부여 추진 등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개혁’ 분야는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개선, 신고 민원처리 제도 개선, 재외공관 예산·행정 업무 운영 개선 과제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 아울러, 방산비리 근절 및 투명성 강화, 기상 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등 기존과제도 보완·추진한다.
- ‘법질서 세우기’ 분야는 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척결 등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 다운계약서 작성, 부실감정평가 등 부동산거래 관행 개선,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분야는 방송 외주제작·협찬거래 시 불공정 관행 개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식 합리적 개선 등을 신규과제로 선정하고,
 -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일상생활 중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관행도 지속 개선한다.
- ‘국민안전’ 분야는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신종 마약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 과제를 새롭게 추진하고,
 -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 불량식품 척결 등 기존과제를 보완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2016년 비정상외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과제 주요 예시
 (별첨) 2016년 비정상외 정상화 추진계획(안)

<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과제 >

분야	주요 정상화 과제 (예시)	
① 공공부문 개혁 (19개)	기존 (15개)	·방산비리 근절 및 투명성 강화(방위사업 감독강화, 무역대리업자 관리강화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소극행정 근절, 복지포인트 합리적 개선 등)
	신규 (4개)	·공공조달 불합리한 관행개선(구매규격 사전공개 확대, 계약보증금 분할납부 등) ·신고 민원처리 제도개선(신고유형 명확화, 처리기간 명시, 수리간주제 도입 등) ·재외공관 예산·행정 업무 운영 개선(예산집행 명확화, 직원 인사 및 처우개선 등)
② 법질서 세우기 (28개)	기존 (23개)	·의료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수술의사 변경시 사전설명 및 동의 의무 부과 등) ·다운계약서, 부실감정평가 등 부동산거래 관행 개선(분양권 전매를 신고대상에 추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도입 등)
	신규 (5개)	·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촉탁의 자격제도 개선, 야간인력 추가 등)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척결(금품수수, 불법하도급, 집단행동 등 집중단속) ·보훈·위탁병원 진료체계 개선(손 혈관 활용 '본인확인시스템' 구축 등)
③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37개)	기존 (31개)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재승인 요건 엄격 부과, 점검강화 등) ·중소협력사에 대한 거래·협력 관행 개선(상생결제시스템 및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대 등)
	신규 (6개)	·방송 외주제작·협찬 거래시 불공정 관행 개선(방송사 평가시 외주제작사와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등 노력평가 항목 신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식 합리적 개선(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부과방식 합리적 개선(월할 →일할 기준으로 연체금 산정)
④ 국민안전 (16개)	기존 (10개)	·불량식품 척결(식품업체 자가검사 사후관리 강화, 수입식품 검사강화 등)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 개선(대용량 버스 공급확대, 배차간격 단축 등)
	신규 (6개)	·어선 등 선박의 안전관리기준 강화(어선의 복원성·만재흡수선 기준개선 등) ·신종마약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검색시스템 구축, 맞춤형 단속실시 등)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지중화사업 활성화, 정비투자 확대 등)